

여당, 5·18 폼훼 발언 호남 표심 촉각

장동혁 ‘사과 진정성’... 박은식 ‘아쉬움’ 토로 윤재갑 “국힘 공관위 정체성마저 의심” 맹공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도태후 후보의 과거 5·18 민주화운동 ‘ 폼훼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도 후보의 사과 이후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했지만 당내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

에서 2019년 5·18 민주화운동 ‘ 폼훼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도태후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 “도태후 후보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도태후의 두 번째 (사과) 입장문을 통해 5·18 정신에 대한 도태후의 입장이 명확해졌고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졌다고

판단했고, 국민께서 그 부분까지도 지켜봐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전날 사과문에서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제검토 요청으로 공천 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두 차례 대국민사

과로 몸을 바짝 낮추면서 구제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유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후보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은 아니다”며 “방어 논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결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 동남을 공천자로 확정된 박은식 비대위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도 변호사 공천에 대해 강

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해남·완도·진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힘당의 역사 인식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는 검증까지 스스로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예비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공천을 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는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정치를 하는지 정체성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발언하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원이,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 목표의대 유치를 강력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천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 있다”며 “양측의 숫자 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만

으로는 고사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인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목표의대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與, 연일 ‘조국 때리기’...범야권 결집 우려

국민의힘이 연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비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공천 국면에서 계파갈등 내용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구호 아래 집결하는 현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완벽하게 벤치마킹해 등장한 것이 조국혁신당”이라며 “2심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정치권력으로 이를 회피해보려 창당하고 출마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 “전대미문의 사법 리스크를 겪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잡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민주-시민사회, 비례 공천 놓고 내홍 고조

재추천 요청받은 시민사회 “이대로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목소리” 민주, 사퇴 전지에·정영이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도 우려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간 괴열음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의 반대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나란히 자진 낙마하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양 세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결국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조심스럽게 나온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13일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내부에 있다”며 “일단 2명이 사퇴한

상태니 재추천이든 새 인물 추천이든 입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레농민회장은 ‘반미 투쟁’ 등 과거 이력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선발했던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여당과 일부 수구 언론의 중북몰이에 부화뇌동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교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비례 공천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의 이력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전 소장은 병역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서류 심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시민사회 측에 이날 안으로 두 여성 비례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후보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지에·정영이 후보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성 비례 1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에 1번에 자당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의대 정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상운 사회수석,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입장 밝혀

대통령실 장상운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

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들어간 거라 이걸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